

【특 집】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협력: 현황, 정책, 시사점*

이현태**

김준영***

차례

- I. 서론
- II. 한국의 동북경제협력 현황과 여건
- III. 한국의 동북경제협력정책 평가
- IV. 결론: 전망과 시사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과 동북지역의 경제교류 현황을 평가한 후 양자의 경제협력 여건을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최근 동북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동북의 경제 교류 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었다. 동북의 심각한 경기 침체는 한국·동북 간의 무역, 투자를 현저히 위축시키면서, 양자 간 교류가 전체 중국 무역·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역대 최저치인 각각 4.6%, 1.8%까지 떨어졌다. 이어서 한국·동북 경제협력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살펴보았다. 기회요인으로는 첫째, 동북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결합지로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고, 둘째, 동북 지방정

* 본 논문은 2019년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이현태 외(2017), 『13·5 계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크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됨.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조교수.

*** (주)탄탄글로벌네트워크 대표.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박사 수료.

부가 한국에 대한 우대적인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셋째, 거대한 소비시장과 다양한 투자가능성이 있고, 넷째, 확대되는 중국과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test-bed)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섯째,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인 9-Bridge 사업이 동북에서도 가능하고, 여섯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향후 북한 개방 시 중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되었다. 반면, 도전요인으로는 첫째, 동북이 경제교류를 하기에는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제도적으로 낙후되었고, 둘째, 사드 제재 등을 거치면서 동북 내 한국에 대한 사업 우호적 정서(business friendly)가 낮아지면서 동북 지역에서의 한국 경제의 위상이 과거보다 퇴색했으며, 셋째, 북한 등 동북과 관련된 국제정세도 한국의 대동북 경제협력에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동북 협력의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그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협력의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협의의 틀과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정책 추진의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이후 동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중국 동북의 향후 발전 계획까지 고려하여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2020년까지 중국의 13차 5개년 기간 동안 동북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신북방정책의 기여를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중국의 2021~2025년 14차 5개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한국·동북 지역 경제협력, 신북방정책,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I. 서론

중국 동북은 라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을 포함하며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이다.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환발해 지역에 이은 4대 경제권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차항출해(借港出海, 항구를 빌려 동해로 진출)' 정책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문화가 유사한 중국동포가 많아 한·중 수교 초기 한국의 무역·투자 진출이 활발했었다. 그러나 점차 연해지역에 밀려 그 위상이 하락하였고 지금도 경제 교류가 활발한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

북한 교역중심지로서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¹

한국 정부도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에서 중국에서 유일하게 동북을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동북은 한반도 북방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 적합하며, 한민족의 활동 무대로서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으로 한반도와 연계가 강하고, 북한개발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신경제지대’ 정책과도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2월 한중 경제장관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동북3성에서 실현하자는데 합의하였고,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사가 이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이 한국과 동북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한국과 동북의 경제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신북방정책의 동북협력 전략을 평가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한국과 동북의 협력에 대한 연구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 첫째, 한국과 동북3성의 지역 간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둔 연구이다. 이현태 외(2017)는 한국 정부가 13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협력 전략에 대해 제시하였다. 김준영 외(2017)는 한국·동북 협력 상황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오통(五通) 맥락에서 평가하고 협력 제약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임수호 외(2017), 이현주 외(2018)은 각각 한국과 연변 지역, 훈춘 지역의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둘째, 북한의 개방을 염두에 두고 한국·북한·중국을 연계하여 동북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현태 외(2019), 중소기업연구원(2015)는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예술·관광, 단동-신의주, 훈춘-나선 등 여러 분야·지역에 대한 남북중 삼자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셋째, 서종원(2018), 이주호(2017) 등은 동북을 지나는 일대일로 중몽러 회랑과

1 이현태 외, 2017, 『13·5 계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쪽.

관련한 교통·물류에서의 한중 경제협력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현태 외(2017)를 보완하는 연구이나 최근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동북협력과 관련해서 평가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미래 동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끌어낸다는 면에서 새로운 기여가 있다. 이를 위해 2 장에서는 최근 한국과 동북지역 간 경제협력현황과 향후 여건을 살펴본다. 3 장에서는 한국의 동북 경제협력 정책을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4 장 결론에서는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한국의 동북경제협력 현황과 여건

1. 무역과 투자

한국·동북의 무역은 2005년 66.4억 달러에서 2018년 122.6억 달러로 1.84배 증가했다. 연평균 4.8% 성장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중국 무역이 연평균 8.2%씩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크게 낮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 중국 무역이 1,120억 달러에서 3,132억 달러로 2.8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8.2%씩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 이에 따라 한국·동북이 한국·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6.6%에서 4.6%로 감소했다(그림1). 특히 2010년대 들어서며 전체 비중이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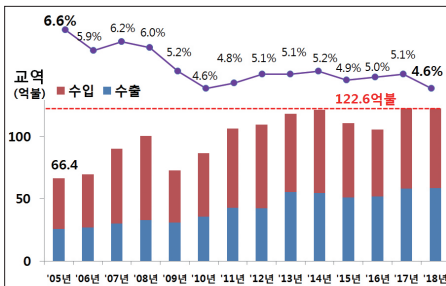


그림1. 한국의 대동북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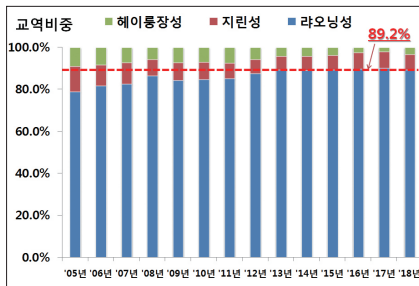


그림2. 한국과 동북 성별 무역액 비중 추이

※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9)

평균 5%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동북 무역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에 편중되어 있다. 랴오닝성 비중은 2005년 이후 80%를 넘어선 후 계속 상승하여 2018년에는 89.2%에 이르렀다(그림2). 동기간 지린성·헤이룽장성과의 무역이 정체되었다. 한국의 대동북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유기화합물, 철강 등이며 수입품은 석유, 합금강, 섬유, 곡물 등이다. 즉, 한국은 동북에 중화학공업 관련 부품·소재를 수출하고 동북에서 원자재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동북 직접투자도 무역과 마찬가지로 2010년 617.4백만 달러에서 2018년 85.9백만 달러까지(1/9 수준) 대폭 감소하였다(그림 3). 투자 급감은 대중국 투자에서 동북의 비중을 16.8%에서 1.8%까지 떨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신장타이(新常态)가 본격화된 2012년부터 그 비중이 평균 4.0%에 그쳤다. 동북이 한국기업에게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역과는 달리 투자에서는 랴오닝성 편중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4>에서 보듯이, 2014~2016년에는 지린성 투자가 랴오닝성 투자를 넘어섰다.

동북3성 투자는 첫째,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압도하며(2012~2018년 제조업 투자비중 평균 83.1%), 둘째, 제조업은 자동차, 기계장비, 운송장비, 식음료 등에, 서비스업은 금융, 부동산, 도소매, 음식점 등에 투자하며, 셋째, 랴오닝성과 지린성으로 투자가 양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주요 투자기업으로 랴오닝성에 현대LCD, LG산전, 만도 등이, 지린성에는 포스코, 농심, 쌍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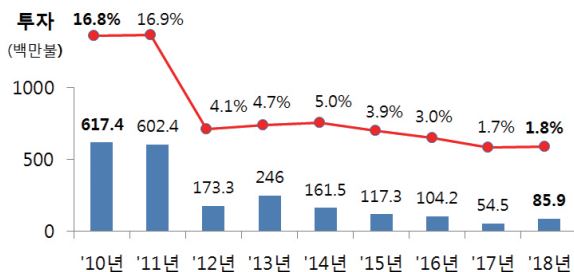


그림3. 한국의 대동북3성 직접투자 추이

※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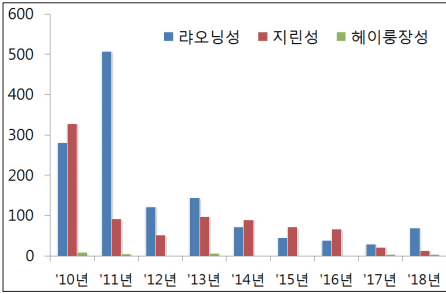


그림4. 대동북 각 성별 직접투자 추이

※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9)

등이 있다.

한국·동북 무역·투자의 이러한 침체는 우선 동북 지역이 경기 침체로 대외 무역·투자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투자 규모는 통상 지역의 경제 규모(GRDP)에 비례한다. 특히 동북3성에서 대부분의 대외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랴오닝성의 지역총생산(GRDP)

성장률이 2010년대 -2.5%(2016년)까지 떨어지는 등 동북의 경제 침체는 중국에서도 가장 안 좋은 수준이다. 그 결과 세계의 대동북 무역·투자 규모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대와 9%대로 추락했다(그림 5, 6). 이에 따라 한국과의 경제교류 또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북은 향후 중국의 신장타이(新常态)의 심화, 미·중 갈등 장기화 등으로 추가적인 경기 둔화와 무역·투자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예측기관 EIU는 동북의 경제성장률이 2014년 6.0%, 2018년 5.0%, 2020년 4.8%로 낮아진다고 예측하였다. 특히 한국의 동북 투자의 경우 외자에 대한 혜택 감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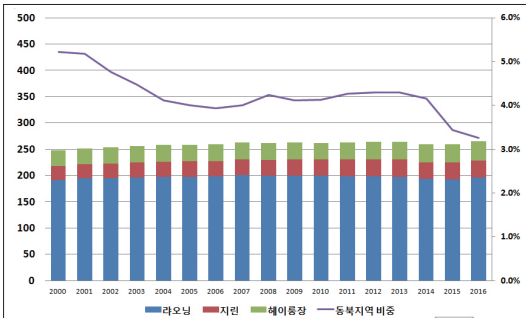


그림5. 동북지역의 對세계 무역(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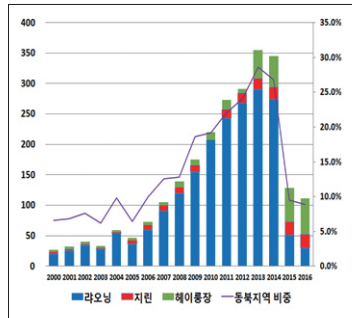


그림6. 동북지역의 FDI 유치(억불, %)

※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9)

내 인건비 상승 등 전통적인 요인과 함께 사드 제재의 장기화 등으로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 향후 여건: 기회요인과 도전요인²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과 동북의 경제협력 상황은 좋지 않다. 그러나 동북은 한반도와 국경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한국에게는 여전히 기회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동북은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전략들의 결합지이다. 중국 동북(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은 한반도, 러시아, 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동북은 몽고와 러시아를 통하여 유럽으로 향하는 북방통로의 시작점이고 동해를 통해 한국, 일본,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연결되는 대통로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지리적 위치로 인해 동북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한반도신경제지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러시아의 신동북정책이 공영발전할 수 있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협력가능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그림7).

둘째, 동북 지방정부가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북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으로, 동북3성은 한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외협력,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다³. 특히, 랴오닝성은 2017년 4월 선양, 다렌, 잉코우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출범시키고 ‘동북아 국가와 전방위 협력 추진’, ‘국가간 양방향 투자촉진 협력의 신매커니즘 구축’, ‘유라시아 연결의 육해공 대통로 건설’,

2 대동북 협력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이현태 외, 2017, 4장 참조.

3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9)에 따르면 동북3성의 대한민국 협력희망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바이오의약, 자동차부품, IT, 정밀기계, 의료 등 ② (지린성 중·한 국제협력시험구) 바이오의약, 자동차부품, IT, 의료·미용, 문화콘텐츠 등 ③ (헤이룽성 자유무역시험구):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장비, 바이오·의약 등

‘현대물류시스템과 국제해운센터 건설’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과의 협력을 ‘계획’ 안에 명시). 지린성은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한중국제합작시범구’를 출범시키고 한국기업을 위한 맞춤형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범구 안에 통관, 검역, 인증, 유통, R&D, 인력 교류, 생산가공 등 전반적인 한중간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⁴ 중국 국무원도 2020년 4월 27일부로 지린성 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출한 한중 국제합작 시범구 총체적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시범구 개발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셋째, 동북은 거대한 소비시장이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이기도 하다. 동북은 인구가 1억 명에 가까운 소비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한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 과거로서부터 내려온 문화의 유사성, 한국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동포 사회의 존재, 저발전지역으로서의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 등이 있어 신(新)시장 및 투자 목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다. 동북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협력대상 14개 지역 중 2018년 무역과 투자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함으로써 주요 협력대상으로서 높은 위상을 보여주었다. 한-동북 간 무역 규모는 러시아를 제외한 신북방정책 협력 대상 전체보다 2배 더 많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그림 8, 9).⁵ 또한 동북은 석유화학(다칭), 자동차(이치), 철강(안산) 등 기존 노후 산업기지의 현대화⁶ 및 넓

4 지린성은 한국과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도 2018년부터 위원장 및 실무진 등이 수차례 현지 방문을 통해 지린성과의 협력 채널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5 2017년 기준 경제/인구 규모로 보아도 랴오닝성 하나(국내총생산 \$3,825억, 인구 4,500만)으로 중앙아시아 최대국가인 카자흐스탄(1,594억\$, 1,804만), 우즈베키스탄(487억\$, 3,239만)을 수배 이상 압도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경제교류에 훨씬 유리하다.

6 제조업 혁신 측면에서 동북과 협력에 적극적인 선진국은 독일이다. 랴오닝성 심양에는 중·독 협력 플랫폼인 중·독 첨단장비 제조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독일의 인터스트리 4.0과 중국의 중국제조2025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운영 또한 비교적 성공적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하였다고 알려져 있다(‘15.12월 조성, 그간 371개 프로젝트 실행, 총 투자액 3,200억 위안 등). 2015년 국무원 비준 후 산업단지 내 독일 입주기업이 설립한 독일상회 관계자가 상주하며 중국과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관할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를 위해 중·독 산업펀드가 조성되어 있다(중국 지방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등이 50:50로 출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9.



그림7. 동북3성의 지리적 위치

※ 자료: 중한산업원 홈페이지 (http://www.cksp.com/pcsite/index/nav?navPath=gov_intro) (검색일: 2019.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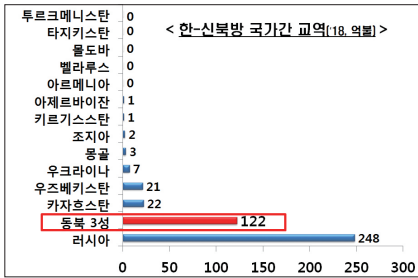


그림8. 신북방정책 협력대상국과의 교역(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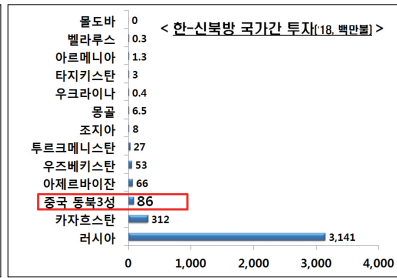


그림9. 신북방정책 협력대상국과의 투자(억불)

※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9)

은 곡창지대(옥수수·콩 생산)를 통한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조만간 한·중 서비스·투자 FTA로 진입문턱이 낮아지면 동북3성이 비교우위를 지닌 바이오·의약·헬스, 제약·미용, 문화콘텐츠 및 관광 등에도 투자할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도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축소(1995년 107개→ 2017년 35개), 행정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세계은행의 중국의 기업환

경평가 순위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등 전반적인 대중국 투자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WB, Doing business 2017 - 2020): 2017년 78위→2020년 31위).⁷

넷째, 동북은 확대되는 중국과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은 과거의 수출가공중심의 산업단지 모델에서 광대한 국내시장을 기반을 둔 내수 위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역은 중국 전역 및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test-bed)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현재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동북3성 지방정부들의 정책을 활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협력 플랫폼에 진입하여 중국의 핵심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예. 지린성의 한중 국제합작시범구, 랴오닝성의 자유무역시험구). 이를 위해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을 동북에서 조성할 때 북방경제협력위원회-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사-동북3성 정부 채널을 통해 한국의 요구사항을 담는 노력이 중요하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결합된 플랫폼을 형성하고 한국 기업이 들어가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심양-북경 고속철 연결(2019), 하얼빈·장춘공항 확장(2018), 중몽리 경제회랑 건설 등으로 교통·물류여건이 지속 개선되면서 중국 국내 및 유라시아 시장이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인 9-Bridge 사업이 동북에서도 가능하다. 한국이 신북방정책에서 러시아에 제안한 9-Bridge(철도, 항만, 가스,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협력 사업을 동북3성에서도 한국-중국-북한-러시아 등과 다자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할 수 있다. 동북3성의 산업구조로 볼 때, 9-Bridge사업 중 철도, 풍력발전, 농업, 수산업 등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높고 수요도 많기에 공동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예를 들어, 철도사업의 경우 동북3성은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한 내륙 및 중앙아시아, 유럽, 만주횡단철도(TMR)를 통한 북한(나선)-러시아(포시에트, 자루비노)-훈춘-

7 자세한 내용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website (<https://www.doingbusiness.org>) 참조 (검색일: 2019. 12. 1).

장춘-내몽고 연결, 몽골횡단철도(TMGR)을 통한 장춘-심양-후허하오터-우란바토르로, 하얼빈-치치하얼-만저우리-러시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북한(나선)-블라디보스톡-러시아-유럽으로 연결되는 등 또 다른 TSR을 통해 한반도로부터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각지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랴오닝성 정부가 선정한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계획안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목표이기도 하다.⁸ 또한, 동북3성은 중국 최대의 곡창지대로 2억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있는 옥수수, 쌀, 대두 등을 생산하는데, 농업은 동북3성의 산업 비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농산물 가공산업, 종자개발산업, 화학비료 생산, 농작물 배양기술 등 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아 한국 농업과의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력은 동북3성 북쪽의 대초원 지역은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광활한 지역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할 만하다.

여섯째, 동북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향후 북한 개방시 중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북아의 안정,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필수적인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과 1,600Km의 국경을 공유하는 동북에서 북한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협력 플랫폼 시험하고 북한의 참여공간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동북에서의 한중 협력을 통한 성공 플랫폼을 만들어 향후 북한이 이런 성공 플랫폼을 확인한 후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동북3성에서 중국과 사업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북한이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을 공간을 확보해두고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에서 한국-중국-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모델(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향후 북한 개방 시 가능한 대북한 협력 모델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즉, 동북에서의 한·중 간의 협력 성공은 향후 남·북·중 협력, 남·북·러 협력, 남·북·중·러 4각 협력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중

8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이 실현 시 한반도와 동북이 1일 생활권을 형성하며 포함 인구가 거의 2억 명에 육박하게 된다.

은 모델로서 작용하면서 북한을 다자협력과 개방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⁹ 예를 들어, 동북과의 철도 관련 협력을 강화한 후 향후 북한이 이에 참여할 경우 동북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통해 유럽·중양아 등으로의 물류 비용 절감 및 한반도 동북 1일 생활권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곧 북한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의 동북경제협력에는 도전요인도 적지 않다. 첫째, 협력의 대상인 동북지역이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선진 지역인 베이징, 상하이, 선전에 인프라이와 우수한 인재가 더욱 집중되면서 동북의 인재 유출이 계속되고 선진적인 인프라 구축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특유의 중앙 국유기업과 관료주의, 개방에 소극적인 정책 스탠스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¹⁰ 아울러, 해양과 인접하지 않는 지린성·헤이룽장성의 대외 교역여건도 여전히 취약하다. 가령, 지린성에서 그간 추진해온 차항출해를 위한 국가급 개발계획인 창지투 전략은 북한 나진-선봉 쪽 개방이 요원하고 러시아 자루비노 등을 통한 통로 또한 국경 통관지체, 고운임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

둘째, 동북 내 한국에 대한 사업 우호적(business friendly) 정서가 낮아졌다. 동북 지역에서의 한국 경제의 위상이 과거보다 퇴색했다. 한국 기업들의 동북 지역 진출 사례도 줄고,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갈등 이후 투자여건 악화로 진출기업 이탈이 늘었다.¹¹ 동북지역 진출 한국 기업 수는 2016년도 4,500개 기업에서 2018년 1,745개 기업으로 약 2,755개 기업이 감소하였다. 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운영도 문제이다. 경직적이고, 차별적인 기업 지원제도 등으로 인해 제도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

9 북방지역에서의 다자 협력(남북중 협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현태 외, 2019, 참조.

10 김준영 외, 2019, 『중국 동북권문록』, 278~290쪽.

11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리서치 랩에 의뢰한 기업 동북진출 설문조사 결과(2019.10)에 따르면 조사대상 500개 기업 중 7.2%에 해당하는 36개사만이 진출 의향을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철강·기계 5, 전기·전자 4, 비철금속 2, 섬유·화학 2, 기타제조업 20, 서비스업 2개사이다(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9).

다¹². 또한, 동북지역과 우리 지자체간의 교류협력도 일회성, 분절적인 경향이 크고, 한국 정부도 중국과의 교역여건이 좋은 일부 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동북과 관련된 국제정세도 한국의 대동북 경제협력에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북핵 문제로 인해 수년째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북한의 개방이 어려워지고 있다. 동북의 대북 협력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을 교두보로 삼아 북한과의 협력을 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동북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개발 등 대규모 다자 인프라 협력사업은 국가 간 이해관계 상이, 북핵 문제 등으로 사업진척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도전요인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정치경제적, 제도문화적 요인들도 앞으로 한국의 동북 진출에 어려움이 될 것이다.

III. 한국의 동북경제협력정책 평가

1. 신북방정책과 동북경제협력¹³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98)로 삼고 있다.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

12 차별적인 기업 지원제도의 사례로는 해외 과실 송금시, 수시 창구 규제를 실시하고, 기업 청산시, 등기 말소까지 0.5~2년 정도 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리커창 총리는 동북지역 건설 프로젝트에 8개월간 133개 분야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고, 아직도 허가사항이 12가지나 남아 있다”고 동북지역의 행정·관료주의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자국 산업 보호와 자국기업 육성을 위해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하는 관행도 여전히 남아있다(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9).

13 아래 내용은 한국 정부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644>)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ukbang.go.kr/bukbang/>)를 참조하여 저자 정리(검색일: 2020. 2. 1).

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륙전략이다.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간 FTA 추진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을 통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을 연계해 나가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제3회 동방경제 포럼에서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특히 극동 개발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중점을 둔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으로 9개의 다리(9-Bridge 전략,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를 통한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모델 추진,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 설립, 북방협력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신북방 대상 국가는 거대시장, 풍부한 자원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한국과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한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각국 정책들(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몽골 초원의 길 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역내 평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한국과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신북방정책의 대상국가는 러시아를 필두로 한 총 14개 국가이다.¹⁴ 중국에서는 동북3성이 유일하게 신북방정책의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다.

신북방정책 담당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2017년 8월 출범한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는 2017년 12월 제1차 회의를 열고 5가지 추진방향¹⁵을 정하였고,

14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5 ①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9-BRIDGE 전략추진, ② 유라시아 경제권의 3대 권역 구분과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추진, ③ 유라시아 국가와 경협확대를 위한 제도·금융 인프라 구축, ④ 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및 교류 확대, ⑤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2018년 6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별¹⁶로 분야별 전략과 14개 중점과제가 담긴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9년 11월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신북방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아래 <글상자1>에 정리되어 있다.¹⁷

<글상자 1> 신북방정책의 성과

- ① 인프라기업 신북방 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북방지역 해외건설 수주 150억 달러 달성
 - 같은 기간 북방지역에서는 최초로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 7건 추진
- ② 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 정책제안
 - 북극 LNG 사업 참가 검토, 국내 기업의 북극해 인프라사업 진출, 북극해 항로 국적선사 진출 등 제안
 - 북극항만·물류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한국 주도의 북극 발전 국제금융기구 설립 참여 필요
- ③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발표
 - 「제1차 한-우즈벡 워킹그룹(6.20)」과 「제1차 민·관 합동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6.21)」의 신설 및 개최, 「중앙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발표 등 후속조치 추진
 - 2019년 하반기 중으로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메나 양자 협의체널과 프로젝트 점검회의 개최
 - 「제2차 민관 합동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개최 등 성과확산 추진

16 1)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2)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3)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4)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17 이하 내용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ukbang.go.kr/bukbang/>)를 참조하여 저자 정리(검색일: 2020. 2. 1).

④ 신북방정책 중점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러시아와의 협력 진전, 중앙아시아 등과의 신규 협력 본격화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14개 주관부처의 추진과제를 56개에서 63개로 확대

⑤ 중국 동북3성과의 논의 본격화

- 길림성(장춘)의 당서기 등을 만나 한·중 국제합작시범구 관련, 기업애로해소와 우대혜택 논의를 위한 공동연구와 T/F 운영 합의
- 요녕성(심양시)의 당서기 등을 만나 신무신구·소가툰구 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유치 및 인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신북방정책은 동북협력과 관련해서는 나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중국 동북3성에서 결합하자는 방안이 합의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양국 정부 기관으로 한국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동북진흥사가 선정되었다. 이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진흥사 및 동북3성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수차례 지도자급 상호 방문과 실무진 회의를 진행하였고, 2019년 2월 1차 한중 동북경제협력대회를 베이징에서 열면서 공동 연구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 등에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북방위원장이 2019년 5월, 8월 각각 동북3성을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꾸준히 교류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 및 기업 단체와 수시로 협력하면서 동북 지역 진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중국 측과 협의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동북과의 교역규모와 인적교류를 2025년까지 크게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중점 추진과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설정하면서 향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글상자2).

〈글상자 2〉 동북지역과의 교류협력 추진방안¹⁸

- 비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선도 거점화
- 목표: ▲ 교역규모: '18년 122억불 → '25년 180억불 (연평균 5.7%↑)
 ▲ 인적교류: '18년 255만명 → '25년 350만명 (연평균 4.6%↑)
- 전략: ▲ 기업주도 + 정부 지원, ▲교류협력 기반조성, ▲단계적·점진적 추진
- 4대 중점 추진과제 및 14개 세부과제
- ① 중국 동북지역(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의 성별 지역개발 정책과 상호 연계한 교류협력 추진: 지린성과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랴오닝성과는 「한중산업원」, 헤이룽장성과는 「한국 산업원」 건설 협력 추진.
- ② 지속적·안정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한·동북 간 교류·협력의 틀과 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 추진: 지자체 등과 동북지역 실무협의회 신설, 동북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코트라 무역관 및 aT 사무소 개설 등 신규협력 채널 구축과 활성화,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무역 및 투자금융 등 지속 지원.
- ③ 교역분야 다양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기술·친환경, 벤처창업분야)로 협력 다양화: 뷰티·헬스, 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자동차부품, 농식품 등에 대한 유망품목과 수입자 발굴, 인증지원, 마케팅 지원, 의료, 바이오·제약,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와 창업·기술·환경 분야 협력 강화
- ④ 교류협력 공감대 확산, 드라마·공연 등 문화교류와 유학생 등 인적교류 활성화 추진: 중고생, 유학생, 공무원 교류를 지속하고, 한류 콘텐츠 전시행사 개최 검토 등 문화행사 개최 및 관광협력을 강화하고, 양측 간 협의를 통해 항공편 및 페리 운항 확대 추진.

18 이헌태 외, 2017, 『13·5 계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쪽.

2. 평가

신북방정책은 본격적으로 착수된지 아직 3년에 불과하기에 지금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본고에서는 현재까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동북협력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 성과는 한국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국과 중국 동북3성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협의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과 중국의 동북3성에서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협력 논의 과정에서 이미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양해각서(MOU) 체결). 다만 신북방정책은 이를 보다 실질적인 정책 협의 단계로 진전시켰다는 면에서 성과가 있다.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중국 중앙의 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사, 동북3성 성도 지방인 창춘, 선양, 하얼빈 등의 지방 정부와 빈번한 정책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실무 협의의 틀을 구축하였다. 둘째, 신북방정책은 동북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국내 여러 정부 부처에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동북 지역은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지역이고, 한국의 對 동북 경제협력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신북방정책은 동북에서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 국내 유관 부처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북과의 경제협력까지 염두에 둔 논의도 이루어졌다.

반면 신북방정책을 통한 동북 경제협력의 한계도 여실히 남아있다. 우선, 중국 동북3성과 한국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내는 단계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동북3성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 향후에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한편, 한국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사드 문제 이후 한국 내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 수요가 감소되며 동북3성 경제협력에 대한 유인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협력의 기본 틀은 구성되었으나, 기업과 시

장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둘째, 신북방정책은 현 정부의 다른 정책인 한반도신경제지도, 신남방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추진의 후순위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에 국정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협력 논의가 최우선시되면서 자연스럽게 신북방정책도 북한과의 협력 상황에 연동이 되는 구조가 되었는데, 최근 북한 문제의 해결이 담보상태에 빠지면서 동북과의 경제협력의 성과도 내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반면, 동남아 지역이 한국 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며, 이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북방정책이 정부 내 정책 추진에서 자연스럽게 후순위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2020년 1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¹⁹ 2019년 아세안 10개국 방문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주목받은 신남방정책과 비견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對동북 경제협력의 정책 조율의 틀을 구축하고, 국내 중앙 정부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시키긴 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정책 추진 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現) 정부의 임기가 아직 2년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신북방정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동북 경제 협력을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다.

19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www.bukbang.go.kr/bukbang/>)(검색일: 2020. 2. 1).

IV. 결론: 전망과 시사점

이 논문은 우선 한국과 동북의 경제교류 현황을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본 후 한국·동북의 경제협력 여건을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동북경제협력 정책을 신북방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동북의 경제 교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다. 동북의 경기 침체는 한국·동북 간의 무역, 투자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동북 무역이 전체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6%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는 더 심각하여 2018년 그 비중이 1.8%까지 축소되었다. 무역은 라오닝성에, 투자는 제조업 투자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한국·동북 경제협력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기회요인으로는 첫째, 동북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결합지로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둘째, 동북 지방정부가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셋째, 거대한 소비시장과 다양한 투자가능성이 있다는 점, 넷째, 확대되는 중국과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인 9-Bridge 사업이 동북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여섯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향후 북한 개방 시 중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되었다. 반면, 도전요인으로는 첫째, 협력의 대상인 동북지역이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둘째, 동북 내 한국에 대한 사업 우호적(business friendly) 정서가 낮아졌고, 동북 지역에서의 한국 경제의 위상이 과거보다 퇴색했다는 점, 셋째, 북한 등 동북과 관련된 국제정세도 한국의 대동북 경제협력에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비록 한국·동북 경제교류는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으나 한반도와 국경을 공유하는 동북은 국가전략적, 정치경제적,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북 협력의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동북 경제협력의 공감대를 한층 확대하고, 정책 협의의 틀과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가 부재하고, 다른 정책들에 비해 정책 추진의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과 동북간의 협력은 경제범위를 넘어 정치적 영향을 받는 전략적 협력에 기반하고 있기에, 동북의 점진적 발전 단계와 장기적 정책 개발에 대비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양국 간 정치적 협력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거시 정책 개발이 시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중국 동북의 향후 발전 계획까지 고려하여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2020년까지의 중국의 13차 5개년 기간 동안 동북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중국의 2021~2025년 14차 5개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동북과 함께 해보는 것이 보다 능동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영·박종상·홍창진, 2019, 『중국 동북 건문록』, 탄탄글로벌네트워크
- 김준영·이현태, 2017,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중국 동북-한국의 협력 평가와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9,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
- 서종원·양하은·최성원·장동명·안국산, 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 인프라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승신·이현태·현상백·조고운·윤규섭·박종상·김준영·박일봉, 2018,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북방경제협력의 연계방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이주호·김범중·김찬호·김은수·장현미·이주원·왕뉘·류자이민·양빈·왕장충·증민, 2016, 『중국 13·5 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현주·어은주·김원배·이종림, 2017,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훈춘 일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현태·최유정·최재희·김태만·림금숙·백지운·서봉교·안국산·원동욱·이왕휘·이현우·이현주·최필수, 2019, 『남북중 경제협력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현태·이상훈·김준영·윤규섭, 2017, 『13·5 계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수호·김준영·박종상·안국산·박일봉, 2017,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연구원, 2015, 『남북중 3각 협력 모델 연구: 신의주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 朴光姬, 2012, 「中国与朝鲜经贸关系转型中的困境及对策」, 『동북아 논단』 第3期
- 方创琳, 2017, 「“一带一路”背景下中国图们江区域国际经济合作的战略与格局」, 『东北亚经济研究』, (6月)
- 王木克, 2015, 「東北亞經濟走廊的現實可能性」, 『世界知识』, 第14期
- 于洪君, 2018, 「如何继续推动半岛局势缓和发展东北经济」, 『盘古智库』, (11月)
- 李成日, 2018, 「“一带一路倡议”与韩国“新北方政策”的对接思路探讨」, 『일대일로』 창 의 의 중

한 경제협력』, 세미나 논문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월)

张东明, 2014, 「朝鲜半岛局势的新变化与中国东北地区发展战略 — 以朝鲜政策调整与中朝经贸合作为中心」, 『日本研究』, 第3期

中共辽宁省委, 2018, 「辽宁省人民政府关于印发《辽宁“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的通知」, (9月)

정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644>)(검색일: 2019. 2.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ukbang.go.kr/bukbang/>)(검색일: 2020. 2. 1).

중한산업원 홈페이지 (http://www.ccksp.com/pcsite/index/nav?navPath=gov_intro)(검색일: 2019. 12. 1)

세계은행 Doing Business website (<https://www.doingbusiness.org>)(검색일: 2019. 12. 1)

투고일: 2020년 2월 15일,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23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23일

▪ Abstract ▪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Northeast China: Status, Policies, and Implications

Lee Hyuntai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nd Kim Junyoung (Tantan Global Network)

Thoug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Northeast China difficultfaces difficulties today, Korea needs to continuously strengthen economic exchange with Northeast China—particularly in regards to national strategies sustain shared political, economic,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The Korean government’s expanding consensus when it comes to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with the Eurasian Initiative and the New Northern Policy (NNP) and the creation of a framework for policy consultation with China are valuable foundations in the two country’s relationship. However, the NNP has produced few tangible and monetary business results, which has led to its weakening salience as a useful policy measure, as was the case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It is thus necessary to design Korea’s strategic countermeasures considering future development plans in Northeast China. This proactive stance beckons a need to advance discussions on Korea’s role in the Northeast China’s 14th Five-Year Plan 2021-2025. Korea’s participation in carrying out practical projects with Northeast China’s NNP can serve as a valuable partnership for futur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word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Northeast China, Korea-China relations